

수입개방 피해 직접보상 '농업 直拂制'

“농민 살고 환경 살고 무역마찰 피하고” ... 선진국들 도입 붐

세 계 농산물 시장은 또 한차례의 '태풍'을 앞두고 있다. 작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 WTO 농산물 협상을 2004년말까지 끝내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EU(유럽연합)·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지난 94년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업 보조금을 크게 줄인데 이어, 새 협상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로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케언즈그룹'으로 통칭되는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이번 새 협상에서 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관철시키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UR 협상의 대원칙은 추곡수매처럼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거나 생산을 증가시키는 보조금(감축대상보조)은 매년 줄여나가되, 생산·가격지지와 관계없는 보조금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입국들은 허용되는 보조금을 늘려가며 자국 농업을 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정부 돈으로 농민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것)'다. 농림부 WTO 대책반 김현수 과장은 "UR이후 농업보조금 정책 추세가 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직불제 = 15개 회원국이 공동농업정

책(CAP)을 쓰는 EU는 2000년 예산중 46%인 415억유로(약 53조원)가 직접지불 등 농업관련 부문에 쓰였을 정도로 농업보조금이 많다. 미국 등 농업 선진국에 비해 영농규모가 작은 반면 농업인구는 많기 때문이다.

우선 일정 농지를 놀리거나 일정한 가축사육 규모를 유지하면 생산에 관계없이 돈을 주는 '보상직불제'가 대표적이다. 곡물 재배 농가의 의무 휴경비율은 원칙적으로 경작면적의 10% 선이다. 다만 경작면적이 20ha 미만인 농가(전체 농가의 73%)는 휴경 의무가 없다. ha당 지급 단가는 한화로 30만원 가량이다.

또 비료·농약을 적게 쓰는 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ha당 45만~90만원 썩의 '환경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산간지역(고도 600~800m)이나 ha당 생산량이 국가 평균의 80% 이하인 지역(조건불리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는 ha당 2만5000~20만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농촌이 관광자원인 유럽의 장점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EU농업보조금 정책의 기본은 곡물·쇠고기·낙농제품에 대해 일정한 지지 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직접지불제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높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가격지지'정책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각국의 주요 직불제 비교

	EU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직불제 형태	- 보상직불제 - 환경직불제 - 조건불리직불제	- 생산자윤계약제 (PFC) - 환경보전직불제	- 생산조정제 - 도작경영안정제 - 조건불리직불제	- EU의 보조금제도 - 국토경영계약제 (CTE)	- 농농업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조건	휴경, 환경보전, 조건불리지역	농지보전 또는 환경보전	생산조정 또는 조건불리지역	농촌경관 유지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공(CTE)	논의 형상 유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대상면적 비중 (총농경지대비)	- 보상직불 42% - 환경직불 20% - 조건불리 20~50% (중복수령도 가능)	- PFC 49% - 환경보전 4%	- 생산조정 36% - 조건불리 34%	- CTE에만 7만5000가구 (전체농가의 10%) 참여	- 농농업직불 46% - 친환경직불 0.3%

정부가 수매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가격지지' 정책이다. 하지만 99년 공동농업정책을 개혁, 지지가격을 15~20%씩 낮추는 대신 보상직불제 단가를 각 국가별로 할당된 금액 내에서 재량껏 올리도록 하는 등 직불제를 확대하는 추세다.

◆스위스·캐나다의 직불제 = '식량안보'를 중시하는 스위스도 EU에 못지않은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97년 직접지불 금액이 농업예산의 58%를 차지할 정도다. EU처럼 환경농업직불 등 다양한 직불제가 있지만, 산악지역이 많기 때

문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가 특히 발달돼 있다. 전체 농가의 58%, 경지면적의 52%가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해 보조금을 받는다.

캐나다는 농산물 수출국으로 드물게 '농민소득안정계정(NISA)'이란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곡물·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의 3%까지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면, 정부가 상업금리 이외에 3%의 이자를 추가로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이다. 농가소득이 과거 5년간의 평균보다 떨어지면 농가는 돈을 찾아 쓸수 있다.

◆일본·한국의 직불제 = 일본은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거나 놀릴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는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98년부터는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쌀 농가와 정부가 출연한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과거 3년간의 평균가격보다 쌀값이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지급하는 '도작(稻作)경영안정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또 재작년부터 경사지역에 농사를 지을 경우 평지와 생산비 격차의 80%를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불상환은 1가구당 1000만원(한화). 하지만 일본의 경우 EU에 비하면 직불제 시행시기도 늦고 금액도 인색한 편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아 농가소득 중 농사를 지어 버는 수입(농업소득)이 20%가 채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직불제 도입시기가 더 늦다. 논농사를 짓는 농민중 일부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는 논농업직불제(ha당 40만~50만원)를 2001년,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는 농가에 친환경직불금(ha당 52만4000원)을 주는 제도를 99년에 도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47%를 차지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가격하락에 대한 소득보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박사는 "우리도 소득 보전장치를 갖추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 7. 2. 조선일보> **농업정보**

농민과 계약 맺고 정부서 보상 프랑스, 국토경영계약제



EU(유럽연합)의 15개 회원국들은 공동농업정책(CAP)을 채택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공동농업정책의 틀 안에서 자국의 실정에 맞는 독특한 '직불제(直拂制)'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가 2000년부터 도입한 '국토경영계약제(CTE)'는 한마디로 광범위한 직불제도다. 농사를 지으면서 수질보호·경관유지·생태계보호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대가로 국가가 이를 보상 형식으로 직불금을 주는 방식이다. 특이한 것은 농가와 국가가 직접 계약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농가가 농약 사용을 매년 일정량씩 줄이겠다고 계약서를 쓰면 정부는 수질보호의 대가로 직불금(1ha당 84만원)을 준다. 계약의 내용을 일정 틀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구당 연간 받을 수 있는 돈은 한도(연간 2100만원)가 정해져 있다. 또 데파르트망(우리의 도에 해당) 농업지주위원회에서 계약 이행을 점검한 결과 농민들이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정지시키거나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계약에 지급되는 자원은 EU의 공동농업정책에서 지원되는 돈과 프랑스 자체 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총당된다. 지난해의 경우 7만 5000가구(전체 농가의 10%)의 농가가 CTE에 참여해 3억3600만유로를 지원 받았다.